시 론

2019년 세상의 농업을 돌아보며

강 용
학사농장 대표

2019년 10월2일,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들이 2천여대의 트랙터를 앞세우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네덜란드 사상 초유의 교통체증사태가 벌어졌고, 시위에 참여한 농민의 자녀들은 같은 시각 장난감 트랙터의 작은 페달을 밟으며 유치원에 등교했다. 농업이 환경오염과 동물학대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농업의 생산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들고 벤치마킹하는 나라이다. 작년 우리나라 농업 수출액이 93억달러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무려 983억달러였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세계 최고 부농국가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한다.

그리고 얼마 뒤인 11월27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5천여대의 트랙터가 모였다.

환경보호와 지하수 보존을 위해 비료사용을 제한하라는 국가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였다.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농업 분야에서도 가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유기농 면적 세계 10위권의 나라이다.

바로 다음날인 11월28일, 프랑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들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트랙터로 막고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역시 부농국가이고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정부의 지원도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50명 가량의 농민들이 삶을 포기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무려 605명의 농민들이 자살을 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농업 선진국 유럽의 지금 모습이다. 유럽은 요즘 우리 농정개혁 논의의 핵심 이슈인 '공익형 직불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란 '생태, 경관, 식량자급의 역할을 농민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 농업이 모델 삼으려하는 EU 농업정책의 설계자는 EU 농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정 개혁 설계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 설정과 농민들의 참여 독려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쌀 생산 국가였던 필리핀에서는 쌀이 부족하다며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총으로 막아서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매년 식량부족의 위기의 경고하는데, 곡물 수출 국가인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한편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트랙터를 몰고 농장이 아닌 거리로 나서는 모습도 보면서, 농업이 가야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솔직히 조금 혼란스럽다.

매년 그랬지만 2019년 올해는 우리나라 농업도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다. 잦은 태풍,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 폭락, 가축전염병,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돌아보니 힘겨운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논란 속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어쨌든 시작되었고, 로컬푸드, 푸드플랜 등은 마치 농업과 농촌의 대안처럼 번져나가고, 농업의 손을 떠나 거대 자본의 자산 플랫폼이 되어버린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선인지 이런저런 논쟁이 계속되고, 농업인구가 1천만명에서 240만으로 1/5로 줄어드는 동안 농협 임직원은 3배가 늘었고, 농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도 대폭 증가했다. 여기저기서 청년 농부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창업지원과 보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쏟아내고, 많은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근본이라고 외치는 모습도 여전한 풍경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우리 농업은 여전히 힘겨운 모습이다. 어느 쪽이 우리 농정이 가야할 방향인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지식이 내겐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다양하게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도 생각해본다. 다양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 본질을 벗어난 다양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낭비되는 모습들도 한편으로 안타깝다.

2019년을 마무리해가면서 한해 우리 농업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다가 문득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떠올린다. 희망은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방향을 잘 정하고, 정밀하고 치밀하게 전진해 나가는 2020년 활기찬 농업농촌을 상상해 본다.

기 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미용인의 자세

박 장 순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

2019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세밑인 지금 방송 매체에서의 뜨거운 화두(話頭)는 '주 52시간 근무제'이다. 정부는 며칠 후인 2020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시기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勞使)가 아무리 합의하였더라도 주 52시간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 단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보건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은 특례제외 업종이며 미용업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에서 49명까지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 시행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미용 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필자가 사회 초년생으로 미용업에 입문하여 헤어 시술, 메이크업, 손톱 관리 등을 하던 1996년에는 한 달에 둘째, 넷째 주 화요일만 휴무였으며 다섯 주까지 있는 달에는 꼬박 20일 내내 근무를 해야만 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였지만, 퇴근 직전에 내방하는 고객이 있으면 밤 11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무자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미용인 건강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예약제 정착이 요원하던 시절인지라 시술 대기 중인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근자(近者) 와서는 한 집 걸러서 있는 헤어숍부터 피부숍과 네일숍에 이르기까지 예약제도가 많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일반 사업장의 생산성 제고(提高)는 미용업에서 기술력과 서비스의 강화로 직결될 수 있다. 개인의 윤택한 삶과 행복 추구를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기로 미용인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첫째, 미용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증가 된 여가 시간을 새로운 미용 매뉴얼(manual)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뉴 모드(new mode)의 헤어커트, 새로운 피부 마사지 테크닉(massage techniques), 메이크업 패턴(make up pattern), 네일미용의 디자인 및 기법에 대한 개발 등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

둘째, 미용인의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본인이 평소 관심 있고 선호하는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 생활, 취미 등을 통하여 예술적 감성을 배가(倍加)함과 동시에 창의력을 고양(高揚)해야 한다.

셋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헤어미용인은 근무시간 내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고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발목 등 관절에 무리가 많이 따르는 직업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피부미용인은 안면이나 전신관리 시 신체적 무리나 체력 고갈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수반되게 되며, 네일미용이나 메이크업 시술 중에는 화학제품 냄새나 파우더 분진에 자연스레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개전(改悛)하고 평소에 조깅, 등산, 수영과 같은 호흡기계 건강에 유익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레포츠를 꾸준히 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岸見一郎)가 집필한 '미움받을 용기'에는 '선(線)으로 여겨진 것이 실은 연속된 작은 점(點)들이며, 선처럼 보이는 삶은 점의 연속이다. 다시 말해 인생이란 찰나(刹那)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등장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은 미용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불청객이 아닌 호재(好材)로 분명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인은 찰나마다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건강하게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용 주의보

추워진 날씨 탓에 따듯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화목보일러,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등 3대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고 있다. 난방용품 사용 증가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커지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3대 용품 관련 화재는 총 2천470건이며, 전기히터 1천18건, 전기열선 751건, 화목보일러 70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 또한 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으로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전기히터는 사용하기 전에 고장 나거나 전기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둘째,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을 경우 열선이 끊어져 전기장판의 고장과 함께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셋째, 열선 설치 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전열기구의 경우 소비전력이 크기 때문에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시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어 가급적 단독 콘센트나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화목보일러 경우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연통 주변 벽과 천장 사이를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화목보일러 내 땔감을 가득 채워 사용하지 말고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이정호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한 잔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12월은 송년 모임 등 각종 모임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잦은 달이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음주강권 문화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2만여건 이상의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3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4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들어간다.

전날 과음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음주단속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지점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옮겨 다니는 스팟(spot)이동식 단속이기 때문에 혹여 단속 어플을 믿고 운전대를 잡은 일은 자충수에 해당한다. 또한 불시에 출근시간대 숙취단속도 병행한다.

음주 후 '나는 괜찮아'라는 마인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모두 한 잔!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김상철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총선 분위기, 정치 냉소 극복이 과제

제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12월17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출판기념회를 통한 본격 경쟁의 불길이 당겨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일에 앞서 오는 10일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길잡이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및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홍보 방법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예비후보등록 시점에 맞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출마 선언과 출판기념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전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비롯해 전 공직자, 변호사 출신 등이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거나 가질 예정이다. 합법적인 홍보수단으로 세 결집을 시도하는 출판기념회도 이어지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직 고위 공직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행사를 마쳤거나 준비 중이다.

이처럼 입지자들의 얼굴 알리기는 본격화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 처리 불투명으로 '게임의 룰'은 제자리걸음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입지자들의 분주한 행보와는 달리 지역 유권자들은 민생에 허덕이며 아직 총선에 이렇다 할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 공수처법 및 선거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과 입지자들이 민심을 얻으려면 우선 민생을 살펴야 한다. 저마다 제시하는 정치적 비전과 도전장에 정치권을 향한 유권자의 냉랭한 마음을 달래줄 방안을 담아야 한다.

인권침해·장애인 차별 대책 마련하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보호 책임이 있는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개탄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700여건에 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721건(11월26일 기준)의 진정 사건 중 496건을 조사 완료했다. 전체 건수가 지난해(596건)보다 125건 늘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전체 26%(17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차별 25%(163건), 경찰 18%(117건),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7%(111건), 지자체 6%(38건), 각급 학교 5%(34건), 공직 유관기관 3%(20건)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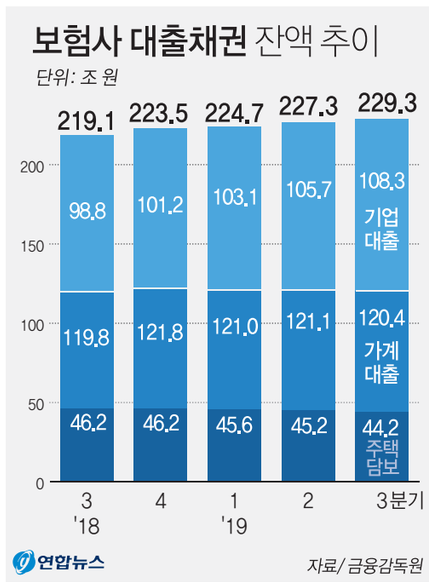
올해부터 시작된 경찰분야와 관련해 부당체포와 경찰 폭언, 과도한 장비 사용 등이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다. 또 지자체장의 비속어 사용, 장애인 차별,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지적됐다. 특히 지자체장이 내뱉은 비속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7년 10월 A군수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말을 해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A군수는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始·처음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제한한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했다.

이밖에 교도소 한 수용자는 95시간, 140여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뒤로 수갑이 채워졌다고 진정을 냈고, 한 종교시설에서는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헌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은 인간이 본래부터 지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렇게 짓밟히거나 박탈당해서는 선진사회에 진입할 수 없다. 인권은 국적과 인종, 성별, 종교, 신분 및 지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파악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국민은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고 좇을 수 있다

그래픽 뉴스

보험사 주택대출 3분기 연속 감소…"대출규제 강화 영향"



보험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 연속 감소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보험회사들의 주택대출 잔액은 44조2천억원으로, 6월 말(45조2천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이는 3분기 연속 감소한 금액으로, 작년 12월 말(46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했고,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보험회사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229조3천억원으로, 직전 분기 말(227조3천억원)보다 0.9%(2조원) 늘었다.

주택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보다 7천억원 줄어든 120조4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은 4천억원(0.7%) 늘어난 64조5천억원이었다.

기업대출은 108조3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증가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대출채권 연체율은 0.31%로 6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6월 말 0.63%에서 9월 말 0.62%로 0.01%포인트 내렸다. 이는 3분기 만에 하락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1%)이 0.01%포인트, 신용·기타대출 연체율(1.37%)이 0.04%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6%로 직전 분기 말(0.11%)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은 0.26%에서 0.25%로 내렸다. 전체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0.19%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鎭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